

투데이 칼럼

전북도는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2023년 11월 2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전북특별자치도내 시외버스 운송회사 5곳(주) 전북고속, (유) 호남고속 등 원고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피고) 간의 행정소송 결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라는 문제에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숭고한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불응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명료하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16일 원고들에게 내린 비수의 노선에 대한 휴업 불허가 처분과, 2024년 6월 21일 미지급 재정 지원금 청구에 대해 내린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는 전북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행정 당국이 공익을 강조하며 운송 사업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 지역 시외버스 운송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익성이 없는 노선(비수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매년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 비수의 노선은 농어촌 및 외곽지역 노선, 교통약자의 일상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원고들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비수의 노선을 운행하며 입은 총손실액은 약 800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파악되었다.

이 오랫동안 받은 재정 지원금으로는 이 손실을 다 보전하지 못했고, 결국 4년간 누적된 총손실액은 약 282억여 원에 이르렀다. 전북도로부터 원고들이 받은 재정 지원금은 평균 77.8%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운송원가, 특히 인건비 상승(2013~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88.47%)은 폭발적이었지만, 시외버스 운임 인상률은 같은 기간 19.17%에 그쳐, 수익 노선의 이익마저도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들이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야 하는 수준으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채무초과(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원고들은 비수의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폐업 내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린 휴업 불허가와 재정지원 거부처분에 대해 "재정지원 일탈·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피고(전북도)는 휴업을 불허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운

송 사업자의 휴업 제한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량 영역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된 사업자에게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둘째, 재정 지원금 거부처분 역시 문제가 있었다. 피고는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 기준 없이 단순히 전년도 예산이나 피고가 임의로 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의 장기간 누적된 적자 규모 등 제반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내버스 등 타 운송 사업자들에게는 비수의 노선 손실액의 대부분(평균 101.8%)이 보전되는 것과 달리,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 및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공익 달성을 위해 운송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공익만 강조하고 운송 사업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재정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지만, 만일 원고

들이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피고가 보호하고자 했던 공익 자체가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북 지역 시외버스 운송사들에게 잠시 숨통을 열어주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피고에게 "적절한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거부 처분들을 취소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게 할 경우 적절하고 균형 잡힌 보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과도하게 버스회사가 빚을 저가면서 무리하게 전북도의 버스 운행 허가에 승복하여 운행한다는 것은 전북도의 무리한 요구이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버스업체들이 누적된 적자로 인해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하여 부득이하게 신청한 휴업 및 재정지원 요구를 더 이상 전북도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길은, 그 공익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사업자들이 파산의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되찾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외 버스회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40억 주차장이 쓰레기장

전북 부안군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는 40억 원 들여 사들인 부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연약지반이어서 논란이다.

결국 주차타워를 포기하고 노면 주차장으로 방향을 바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땅 밑에서 불법 매립된 생활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문화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 시외터미널 인근 한 주차장 공사 부지 단면을 보니 비닐 쓰레기들이 흙과 자갈에 섞여 나무뿌리같이 얽혀 있다.

공사장 곳곳에서는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부안군이 원래 2층짜리 타워형 주차장을 세우려던 부지였지만 연약지반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노상 주차장으로 설계를 바꿨다.

결국 40억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이고도 2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터파기 중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멈췄다.

해당 부지는 1980년대까지 저수지여서 연약 지반일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파보니 주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들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저수지의 깊이는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하는 8미터로 추정된다. 과거 저수지의 부지의 극히 일부만 손만 상황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흙으로 덮는 등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만 11억 원이다.

쓰레기를 모두 폐기할 경우 부안군 자체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부안군은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에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법률 자문 등을 받은 뒤 사업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사모님 모시는 공무원들

도내 지자체가 단체장 배우자를 위한 과도한 의전 논란에 대해 "모두 공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차량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와 무관한 행사까지 특정 공무원들이 따라붙어 차량을 제공하고 수행하는, 이른바 '사모님 의전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핸드폰을 챙겨 들고 행사장 깊숙한 곳까지 개인 차량으로 모셔오는 모습까지, '공무원' 이라기보다 사적인 수행비서에 더 가깝다.

배우자 수행에는 특정 직책이 고정된, 일종의 '의전 라인'이 존재한다. 주무관으로 구성된 의전 라인은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직책의 공무원이 사모님 의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경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자리까지 업무 출장을 낸 전담 공무원이 사모님 곁에 '붙어서' 다니는 것이다.

김제시는 사모님을 위한 모든 의전을 결국 '여성 주민을 만나기 위한 공적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무려 10년 전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지침의 한 문구, "배우자도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와 상식에 부합하는 의전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공적 활동, 공적 행사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참여를 한다.

결국 배우자가 가는 곳이라면, 그리고 집으로 부르면 아무런 제약없이 특정 공무원이 따라붙는 '동행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굳어졌다. 어느 단체장은 앞으로 자신의 배우자 이 동시 공무원이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40억 주차장이 쓰레기장

전북 부안군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는 40억 원을 들여 사들인 부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연약지반이어서 논란이다.

결국 주차타워를 포기하고 노면 주차장으로 방향을 바꿔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땅 밑에서 불법 매립된 생활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문화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안 시외터미널 인근 한 주차장 공사 부지 단면을 보니 비닐 쓰레기들이 흙과 자갈에 섞여 나무뿌리같이 얽혀 있다.

공사장 곳곳에서는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부안군이 원래 2층짜리 타워형 주차장을 세우려던 부지였지만 연약지반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노상 주차장으로 설계를 바꿨다.

결국 40억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이고도 2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터파기 중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멈췄다.

해당 부지는 1980년대까지 저수지여서 연약 지반일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파보니 주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들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저수지의 깊이는 아파트 3층 높이에 달하는 8미터로 추정된다. 과거 저수지의 부지의 극히 일부만 손만 상황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흙으로 덮는 등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만 11억 원이다.

쓰레기를 모두 폐기할 경우 부안군 자체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부안군은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에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법률 자문 등을 받은 뒤 사업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제언

최근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쇼' 사기란 주로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한 단체 예약 손님인 척 전화하여 물건 납품을 받으려 하는데, 사정이 있어 00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업체에서 주문 및 대금을 지불하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노쇼 사기' 예방, 의심과 확인이 필수

성하기 위해 위조된 명함, 공문서나 신분증을 내보이는 등 지영업자들의 눈을 현혹하여 노쇼 범행을 자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관공서, 군부대, 종합병원 등 관계자로 속여 음식점 등에 단체 주문을 하고, 고급 와인 등의 물품을 대리구매 명목으로 구입하게 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사기 공범이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에 주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상사로부터 물건 납품을 받기 전 반드시 주문 후

선결제 해줄것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전화 주문 시에는 반드시 주문자가 속한 회사나 단체에 전화하여 신원이 맞는지, 주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예약금을 지급받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대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